

Deloitte Insights

Nov 2024



트럼프 재집권

**통상·금리·환율 전망과
국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03 2024 미국 대선 결과 및 승패 요인

- 03 대선 - 박빙 예상 깨고 트럼프 압승
- 04 연방의회 선거 - 공화당이 상하원 휩쓸며 '레드 스윙' 전망
- 05 민주당 참패 요인 - 결국 '경제, 경제, 경제'

06 트럼프 2.0 통상·금리·환율 전망 및 국내경제 영향

- 06 통상 - 대미 관세 장벽 및 대중 수출 제약에 대비 필요
- 09 금리 - 미국 금리인하 속도조절 및 인플레이 불안정 대비 필요
- 11 환율 - 강달러에 따른 내수 및 기업투자 위축에 대비 필요

13 트럼프 2.0 국내 산업별 영향

- 13 자동차
- 15 배터리
- 16 반도체
- 17 철강
- 17 조선·해운
- 18 에너지
- 19 제약·바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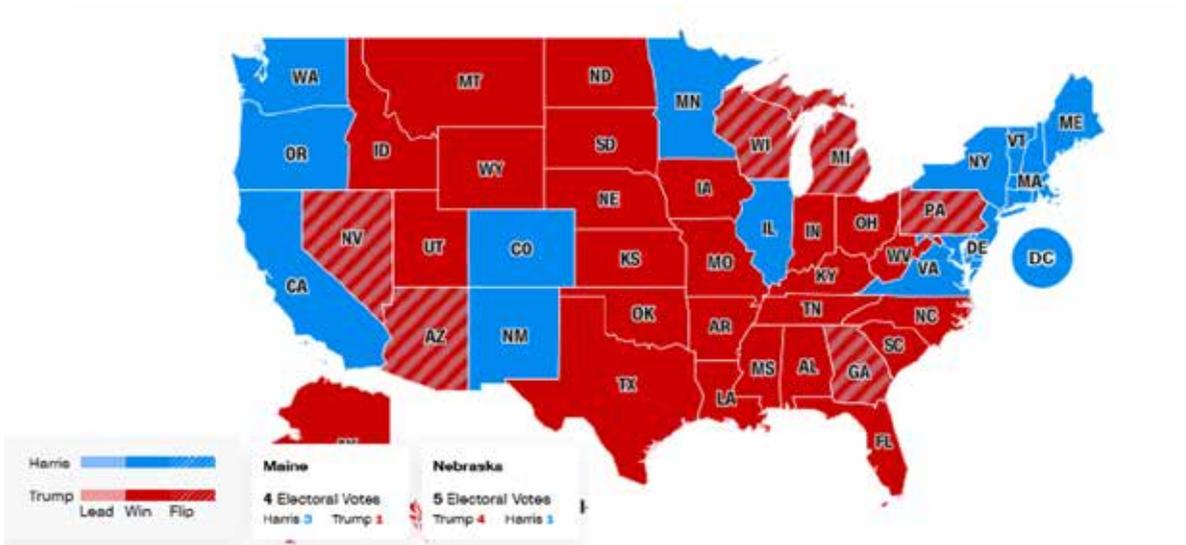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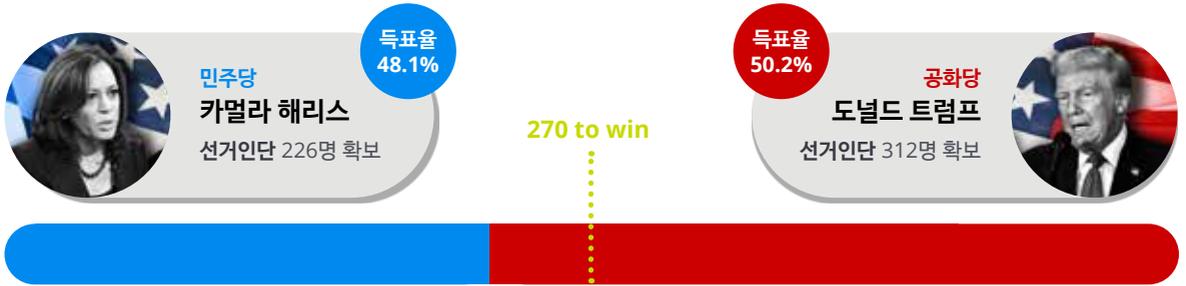
20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 필요



2024 미국 대선 결과 및 승패 요인

대선 - 박빙 예상 깨고 트럼프 압승

그림 1. 2024년 미국 대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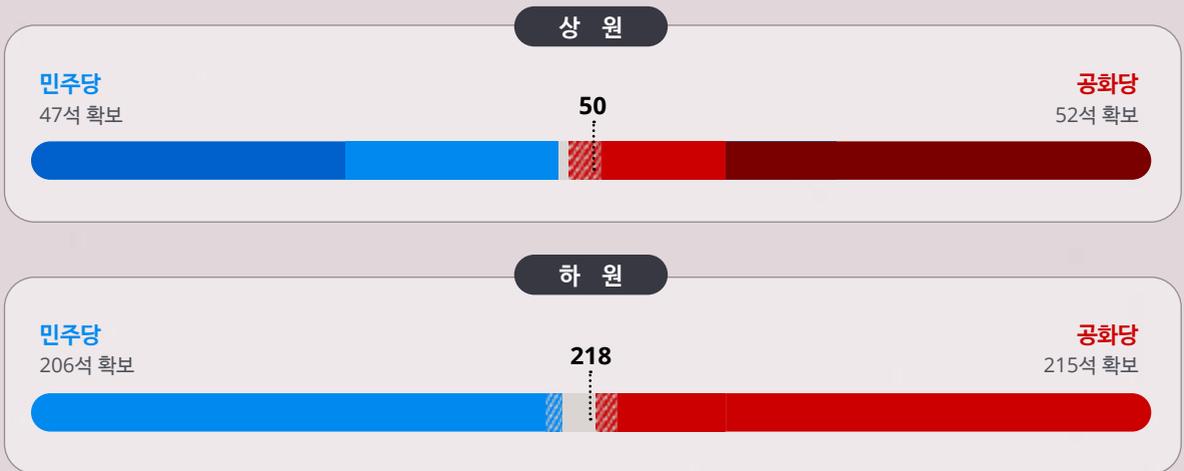


출처: CNN, 딜로이트인사이트 재구성
참조: 한국시각 2024년 11월 12일 오후 7시 정각 기준

-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을 훌쩍 넘는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개표 미완료 선거 주의 결과와 무관하게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 ✔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의 7개 경합주를 싹쓸이했다. 개표 초반 선벨트(Sun Belt)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한 데 이어, 해리스 후보와 초박빙을 거뒀던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뿐 아니라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 블루월(Blue Wall)과 더불어 네바다와 애리조나까지 모두 석권했다.

연방의회 선거 - 공화당이 상하원 휩쓸며 '레드 스윕' 전망

그림 2. 2024년 미국 연방의회 선거 결과



출처: CNN, 딜로이트인사이트 재구성
참조: 한국시각 2024년 11월 12일 오후 7시 정각 기준

- 연방 상원 선거 결과, 공화당이 52석으로 과반인 50석을 넘어 47석을 확보한 민주당에 승리했고, 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215석을 확보해 과반인 218석까지 3석만을 남겨 놓고 있다.
- 2026년 중간선거 때까지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 장악하며 트럼프 정책 추진에 강한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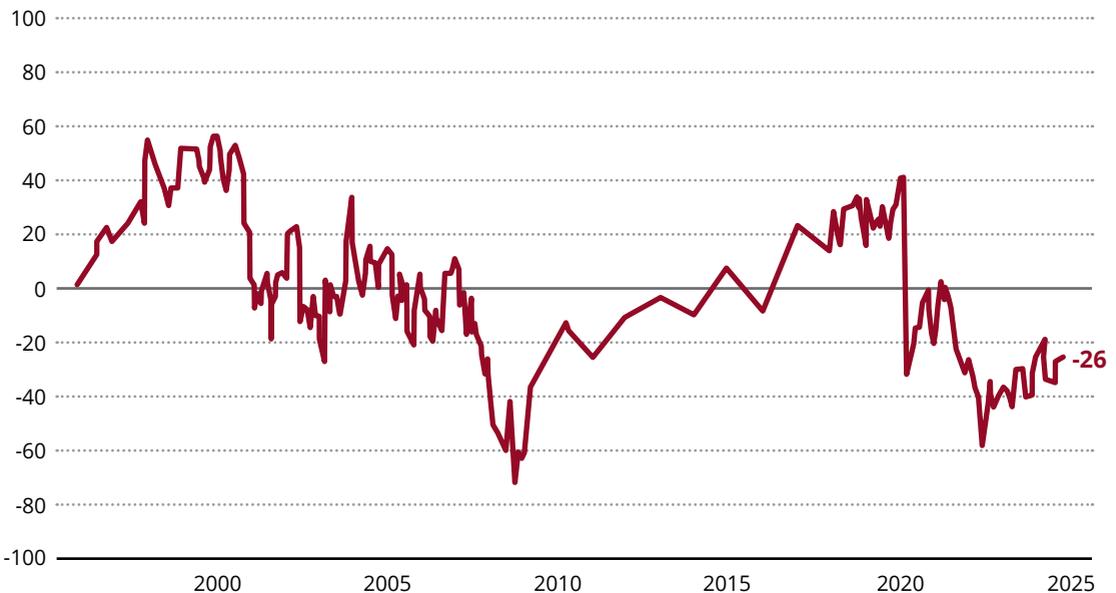
민주당 참패 요인 - 결국 '경제, 경제, 경제'

이번 대선 또한 결국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고물가와 일자리 위협 등 경제 요인들이 승패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경제성장과 실업률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연준이 금리인하 사이클을 시작했음에도, 유권자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현직 행정부에 대한 징벌과 저학력·저소득 유권자를 파고든 트럼프의 승리라는 결과를 낳았다.

- ✔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경기침체이며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체감하는 미국인들이 다수에 속한다(그림 3). 팬데믹 당시 소비자물가지수보다 가파르게 오른 후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좀처럼 내리지 않는 식품 가격이 안정적 식품 물가에 익숙했던 미국인들에게 이례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며 내집 마련이 요원해지고 있다.
- ✔ 당초 민주당 기반으로 여겨졌던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변화도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히스패닉의 경우 젊은 세대로 갈수록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이민 제한이 이미 남미 뿌리와 떨어진 이민 2세대 젊은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은 사안인 데다, 특히 남성 유권자들은 남미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오히려 일자리 경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흑인 민권운동 시대가 이미 과거가 된 지금, 흑인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율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의 정점을 지나 젊은 남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그림 3. 미국 경제신뢰지수

미국 성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1996~2024년)



출처: Gallup, 딜로이트인사이트 재구성

트럼프 2.0 통상·금리·환율 전망 및 국내경제 영향

트럼프 2기 정부가 1기에 비해 더욱 정교화되고 치밀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지속할 것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대선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과 공화당이 휩쓴 상하원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각종 정책과 인선이 빠르게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인상, 규제 완화, 방위비 등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중 일부라도 실현된다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부처 시작해 전 세계 곳곳의 인플레이션, 금리, 경제성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불허성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에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당선에 따른 경제 영향은 현재로서는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 미국과 중국을 모두 주요 파트너국으로 두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세한 변동에도 출렁이는 국내경제가 급물살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 대미 관세 장벽 및 대중 수출 제약에 대비 필요

트럼프 2기 정부 통상정책 기조: 미국 우선주의와 자유무역의 후퇴 지속

관세 인상

-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이 유력시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공약인 상호무역법 제정, 10~20%의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와 최대 60%의 대중 관세를 이행하거나 무역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미국 제조업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공약은 엄격히 지킬 가능성이 크다.
- 트럼프 진영은 세계 질서가 극단적 세계화로 치달아 왔으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편관세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 2024년 9월 미국 무역적자가 844억 달러로 2022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첫 번째 타깃으로 대미 무역흑자가 큰 파트너국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9월 기준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국은 중국(269억 달러)과 유럽연합(238억 달러), 멕시코(160억 달러)가 1~3위를 차지했고, 한국(57억 달러)은 9위를 기록했다(그림 4).
-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미국의 70대 무역 파트너국의 양자간 무역수지, 경수수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6가지 요인을 집계해 '트럼프 리스크 지수(Trump Risk Index)'¹를 집계했다. 랭킹에서 USMCA 가입국인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1, 3위를 기록했고, 대미 무역흑자가 막대한 중국이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10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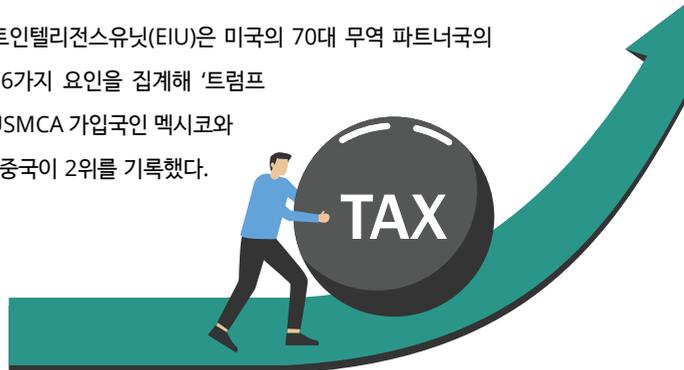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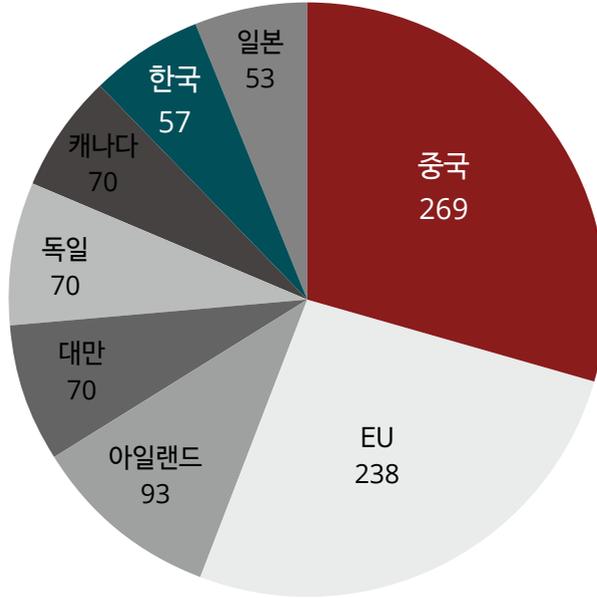


그림 4. 미국의 10개 상품무역 적자국

단위: 1억 달러



출처: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epartment of Commerce, 딜로이트인사이드 재구성

무역협정 재협상

- ✔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인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을 겨냥하고 한미 FTA와 USMCA 등 기존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의 철회를 위협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 ✔ 트럼프 진영은 대선 캠페인 당시 미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유럽, 한국,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을 지목하며, 수년간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배경의 구조적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며 무역 무임승차에 이용하고 있다는 멕시코를 겨냥한 USMCA 재협상도 전망된다. USMCA는 6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는 일몰 협정으로 오는 2026년 개정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예상된다.

중국 디커플링 중심의 공급망 재편

- ✔ 트럼프가 공약한대로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박탈하면 다른 국가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안 통과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이 유력시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 트럼프는 60%의 대중 관세와 더불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200% 관세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기차 공급망에서 멕시코로 우회하는 중국의 수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 법인세 인하를 통한 제조업 온쇼어링(on-shoring) 유도와 주요 공급망 파트너국들을 대상으로 니어쇼어링(near-shoring)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 영향: 글로벌 수출시장 및 공급망 재편 급물살에 휩쓸리는 한국 경제

- ✔ 미국에서 시작된 관세 경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상당한 무역 비효율성이 발생해 한국의 통상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트럼프 1기 당시 대중 관세 공격을 퍼부은 결과 미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해 결국 관세 효과는 얻지 못하고 무역 비효율성만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이 보복 조치로 중국산 대두와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수입함과 동시에 필리핀과 멕시코 등을 경유해 우회적으로 대미 수출을 지속하면서 비효율적인 수출시장 재편이 발생했다.
- ✔ 관세 공격 → 보복 관세가 되풀이되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발생, 세계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강도 높은 보호무역 정책이 실현되면 세계 GDP가 2025년 0.8%, 2026년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 대미 수출품의 세전가격 인하가 불가피해 수출 기업들의 마진 압박이 증대함과 동시에, 한미 교역이 위축돼 경제성장에 수출 기여도가 하락하고 그 여파로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로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²
- ✔ 반도체 등 대중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한층 노골화되면서 한국이 대중 수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각각 6%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³
- ✔ 미국 주도 중국 디커플링의 핵심이 반도체인 만큼, 미국을 주도로 EU와 일본이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에 한국도 편입을 강화하고 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 이와 동시에 중국의 반도체 원자재 보복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



금리-미국 금리인하 속도조절 및 인플레이 불안정 대비 필요

연준 통화정책 전망: '레드 스윙' 시 인플레이 자극 우려에 금리인하 유보 가능성

인플레이 재발 위험

- ✔ 트럼프 당선인이 '감세와 일자리법' 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나서면 연방 재정적자가 심화돼 인플레이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 ✔ 보편관세와 대중 관세가 실현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과 보복관세 위험이 높아져 인플레이 재발 위험이 높아진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관세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물가는 0.1%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⁴
- ✔ 이민 제한과 불법 이민자(약 1,100만 명 추정) 추방으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임금이 올라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 & 시장금리 상승

- ✔ GDP와 물가 등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안정화,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며 연준이 금리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줄었다. 올해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율 2.8%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고,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도 3%를 밑돌고 있다.
- ✔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 ✔ 미국 대선 전후로 시장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되며(그림 5), 상대적으로 견실한 미국 성장 추세와 트럼프 집권 이후 재정확대 및 물가상승률 상승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5.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변동 추이

단위: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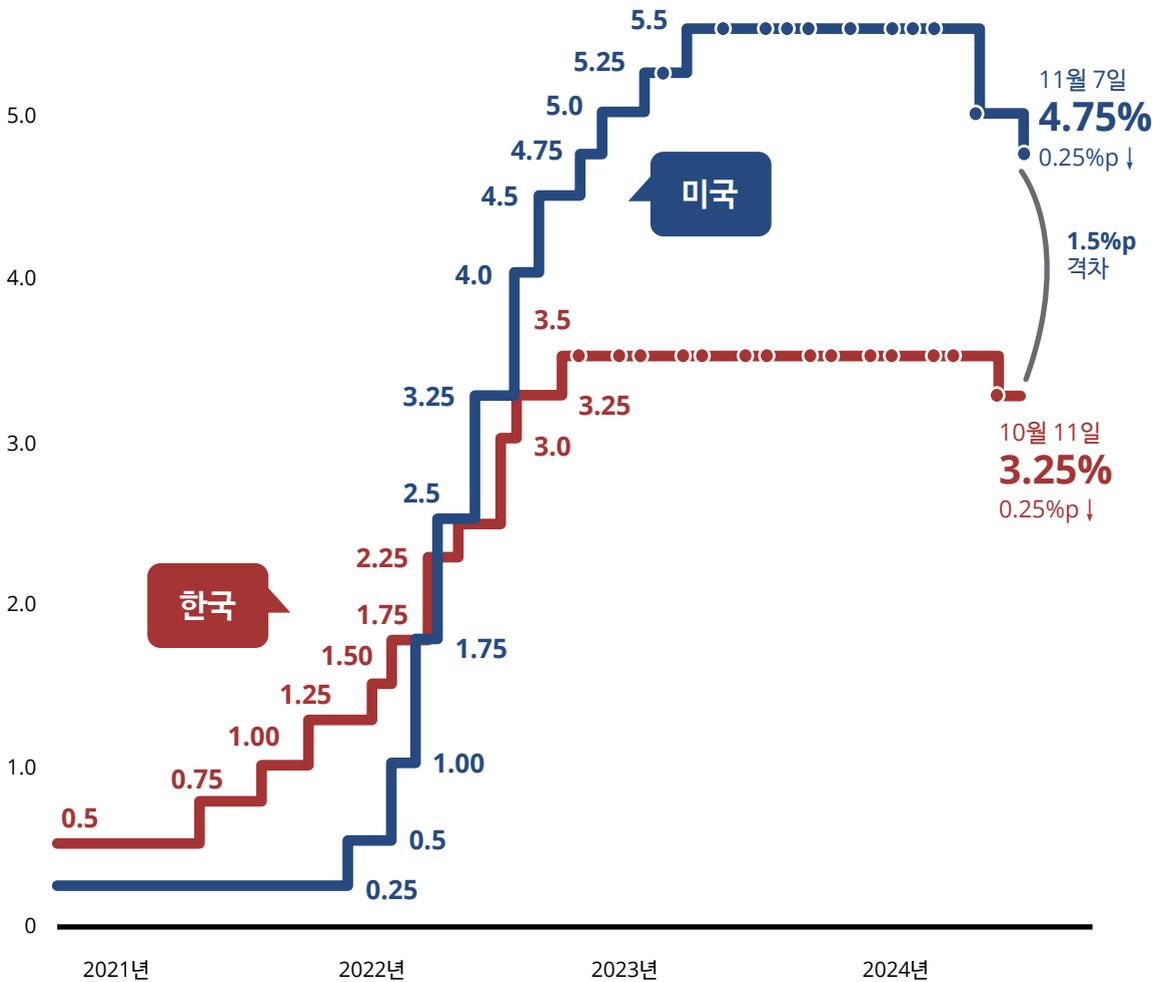
출처: Trading Economics, 딜로이트 인사이트 재구성

국내 경제 영향: 불안정한 금리 환경 속 자본 경색 및 투자 위축 위험

- ✔ 미국의 점진적 금리인하 전망이 무너지면 전 세계적 금리 변동성이 도미노처럼 증대한다. 그 여파로 2024~2025년 한국 경제성장 전망에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이전 전망치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⁵
- ✔ 미국이 금리인하 속도조절에 나서 한-미 금리 격차가 지속되면(그림 6), 국내에서 자본이 유출되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 ✔ 연준이 금리인하를 유보하면 한국도 환율 변동성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를 지연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증가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환율이 다시 통화정책의 고려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림 6. 한미 기준금리 변동 추이 비교

단위: 백분율(%)



출처: 미국 연방준비제도, 한국은행, 딜로이트인사이트 재구성

참조: 미국 기준금리는 목표 범위의 상단을 표시

환율 - 강달러에 따른 내수 및 기업투자 위축에 대비 필요

환율 전망: 트럼프 스톱으로 강달러 유력시

트럼프 2기 재정 확대

- ✔ 대규모 세금 감면 및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금리인하 속도가 늦춰지면 중단기적으로 달러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 ✔ 연준이 금리인하로 버텨주면 달러 상승 압력이 완화되지만, 재정 확대와 보호무역주의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며 금리인하 유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감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과열 우려도 금리인하 사이클 지속 전망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 ✔ 트럼프가 보편 관세와 대중 관세 공약을 이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투자심리와 교역 위축, 공급망 혼란 등이 글로벌 경기둔화 확대되며 강력한 강달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 또한 보호무역주의로 달러화 공급이 줄고 미국 외 지역의 경제성장이 억제되면,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 매력이 상승할 수 있다.



국내 경제 영향: 달러 대비 원화 하락, 한국 경제회복에 악영향

- ✔ 원화 약세는 미국과 중국의 내수가 약해져도 대미·대중 수출을 계속할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내 수입물가를 끌어 올려 소비자 구매력과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원자재와 중간재 등 수입 비용 부담이 증대해 기업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투자 감축에 나설 수 있다.
- ✔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불안해져 수출에 호재가 아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 ✔ 특히 지난 1년간 원화 가치가 유로·엔·위안 등 여타 주요국 통화에 비해 두드러지는 하락폭(6% 이상)을 보이며, 통상 환경 불안정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7.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출처: Trading Economics, 딜로이트 인사이트 재구성

트럼프 2.0 국내 산업별 영향

트럼프 재집권으로 기업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리와 환율 등 경제지표를 비롯해 보편관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의 존폐 여부 등에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큰 폭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어 트럼프 2기가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⁶ 트럼프 2기에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조선·해운, 에너지, 제약·바이오 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산업인 동시에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타 산업에 비해 트럼프 재집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동차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경영 불확실성 증대, 전기차 전환 트렌드는 지속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직면할 경영환경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자동차산업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24년 1월 ~ 8월 통계치 기준, 전체 한국 자동차 수출 대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2.2%에 달한다.⁷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기준 30~40%대인 점을 감안하며 최대 20%포인트 안팎 상승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⁸를 적용할 수도 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폭이 큰 대표 품목이기 때문이다.⁹

관세를 활용한 수입 제한 조치 외에도 새롭게 집권할 트럼프 행정부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폐기 혹은 축소할 것이라는 점도 큰 문제다. 현행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을 건설해 왔고, 지난달 시범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¹⁰ 만약 IRA 폐기 혹은 축소가 현실화한다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공격적 투자가 더 긍정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상업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 차와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S 75D의 75kWh 배터리는 현재 약 13,000달러의 생산 비용이 들지만, 1991년에는 동일한 용량의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5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¹¹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배터리 생산 비용이 더 낮아진다면 보조금 지급 관련 정책과는 무관하게 전기차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전기차 전환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았고, 트럼프 2기 내각의 정책만으로 그 글로벌 추세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EV) 판매량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은 약 1천 7백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0년(약 310만대) 대



비 약 5.4배 증가한 수치이다.¹² 2030년에는 약 4천5백만대, 2035년에는 약 6천5백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도 탄소 배출 규제와 충전 인프라 확충 등에 힘입어 전기차 전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의 IRA 축소 혹은 폐기가 전기차 판매에 일시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8).

환율도 한국 자동차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 완성차 산업의 2023년 영업이익 9조7천억원 증가분 중 환율 상승의 기여분이 1조2천억 원이었고, 2024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 증가 5천억 원 중에서는 환율이 2조5천억 원 기여했다.¹³ 향후 트럼프는 취임 이후, 미·중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미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달러’ 유도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선 대규모 세금 감면 및 경기 부양책이 추가적인 국제 발행과 국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중단기적으로 달러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환율로 인한 경영 실적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Tesla)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긴밀한 관계도 한국 자동차 업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에 약 7,50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고 트럼프의 유세현장을 따라다니며 지지 연설을 하기까지 했다. 테슬라가 큰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은 물론이고 미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등에서 테슬라 및 일론 머스크와 관련 있는 기업들은 트럼프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는 과거 전기차에 대해 너무 비싸고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으나,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지지한다며 입장을 선화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관세, IRA 개정, 환율, 기타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기업의 경영환경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되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전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응방안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현지 공장에서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를 적정선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시장 내 인센티브 최적화 전략, 판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채널 최적화 전략, 미국 내 제조 기반에 대한 원가 절감 방안 수립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림 8.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증가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백만 대



출처: IEA(국제에너지기구): Global EV outlook 2024, 딜로이트 인사이트 재구성



배터리

수요 감소에 대응하며, 배터리 생산 비용 감축을 위한 지속적 투자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시장의 성장성과 IRA 혜택에 주목해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미국에 공장을 계속 증설하며 향후 한국 배터리 3사의 북미 생산 비중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9).

이처럼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상황인데,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공약집에서 전기차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한 인센티브를 줄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주요 3사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수요 감소에 대응해야 하며 투자 계획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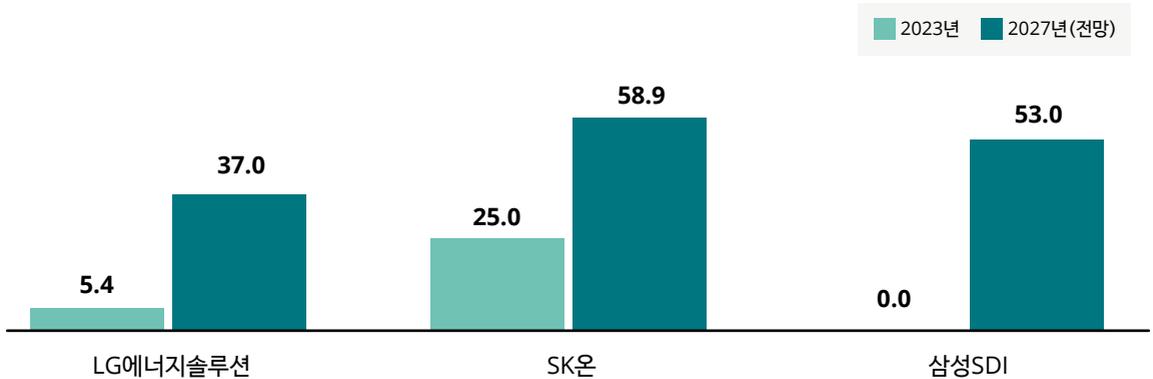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상하원을 장악해도 이미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과 의장이 IRA 폐지 반대 의사를 공식화한 상황이므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IRA로 혜택을 봤던 남부 주를 일컫는 '배터리 벨트'에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해, IRA 법안이 바로 폐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발언한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던 한국의 배터리 주요 3사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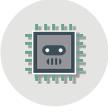
대응방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중간 무역/패권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빠른 실행에 옮겨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한국 배터리 3사의 북미 생산비중 추정치 (%)¹⁴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민일보, SK온



반도체

반도체법 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대중 제재 반사이익과 고부가가치 시장 공략에 집중

한국의 반도체 산업 역시 큰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손을 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반도체법(Chips Act)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2022년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의 대표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법에 의거해 각각 64억달러,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트럼프의 취임 이후, 이 반도체법이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또 다른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 전망도 존재한다.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반도체 분야에서 대(對) 중국 각종 제재를 시행함으로써 한국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앞서 중국 반도체 기업에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반도체 제재는 지금까지 첨단 분야에 집중됐지만 앞으로 범용(레거시) 반도체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반도체 기업을 향한 제재 강화로 한국, 대만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¹⁵ 이에 더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 공장을 짓기로 한 텍사스, 인디애나 지역은 공화당 지지가 강한 지역으로, 취임 이후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하거나 크게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응방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법이 수정되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AI 칩과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 집중 투자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이 제조업 재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만들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 외 시장을 공략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틈새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철강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 지속 전망,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대 및 파트너십 확대에 대응

이미 트럼프 1기 당시 큰 타격을 받았던 철강 산업도 또 다시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수입 철강재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관세 대신 자발적으로 수출 물량을 줄이는 '쿼터 부과국'으로 분류됐다.¹⁶

설상가상으로 철강업계에 중국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향후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의 철강 제품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매우 낮은 가격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한국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응방안

한국 철강 기업들은 미국 내 합작법인 설립 또는 현지 철강 가공 공장 투자를 확대하여, 미국 내 관세 부담을 줄이고 현지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하여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조선·해운

군함 건조 및 정비, 에너지 운반선 발주량 증대 등 기회요인 적극 활용

트럼프 취임 이후 한국의 조선 산업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산업 역시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병존할 것으로 보이나, 타 산업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클 수도 있다고 전망된다. 우선 부정적 영향으로는, 트럼프의 이른바 '관세 폭탄'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규모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며 중장기적으로 조선업 역시 신규 발주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기대감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는 당선이 확정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향후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한국 조선 기업들의 먹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또한, 트럼프 2기 내각이 친환경 드라이브의 속도를 늦추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생산에 대한 규제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탱커, LPG·LNG 운반선의 신규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조선산업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측면에 집중해 트럼프 2기 내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에너지 종류에 따라 상이한 기회/위험 요인 파악 및 신속한 대응 필요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의 기존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는 '反 친환경' 정책 기조를 피력한 바 있다.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2.0 내각 출범 이후 정책적으로는 친환경적 가치에 기반했던 각종 규제를 줄이는 수준의 변화가 예상된다. 화석연료 등 레거시 에너지 기업의 실적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트럼프 1기 내각 시절에도 레거시 에너지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기억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선 석유 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유가 하락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도움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환경 규제를 철폐하더라도 대형 석유회사들의 넷제로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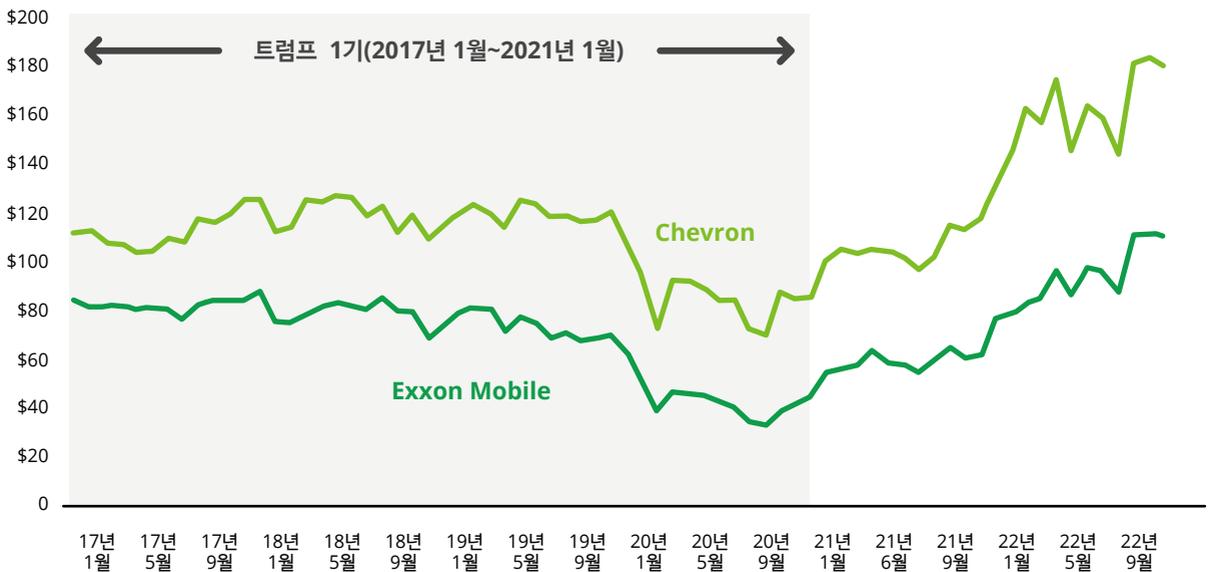
실제로 과거 트럼프 정부의 첫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동안 미국의 대표적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후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임기 시작 시점 대비 반토막 미만 가격으로 급락했고 바이든 취임 이후에 오히려 지속 상승했다. 셰브론 주가 역시 트럼프 1기 임기 내 횡보하다가 팬데믹 기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는 원자력 발전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는 집권 2기 공약패키지 '아젠다 47'에서 기존 원전 이용 확대와 선진 원자로 개발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자력 관련 규제를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원자력 관련 기업들에게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생길 전망이다.

반면,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에게는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내각이 글로벌 친환경 전환 트렌드에 있어 속도 조절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 등 청정 에너지를 활용한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와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이다.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은 유럽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고수, 강화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전략적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반면, 원자력을 비롯해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으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림 10. 엑슨모빌 & 셰브론 주가 추이(2017~2022)



출처: Investing.com, 딜로이트인사이드



제약·바이오

바이오 분야 對중국 미국의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 극대화, 시장 다각화 추진

트럼프는 대선 공약 발표를 통해 '약가 인하'와 '필수 의약품 생산 자국화'를 언급했다. 약가 인하와 관련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수요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¹⁷

이에 더해 트럼프의 중국 견제 기조에 힘입어,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의 법제화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물보안법'은 글로벌 시장에서 떠오르는 중국 첨단 바이오텍(biotech)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여 전 세계 바이오산업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주요 기업들은 미국의 중국 견제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미국의 직접적 대중 견제 가속화로 중국 대표 바이오 기업들의 북미시장 이탈이 예상되는 유전자 분석 및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생산) 분야의 틈새시장 확보로 글로벌 밸류체인 내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트럼프는 약가 인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환자들로 수요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에서 가격 인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시장 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미국 시장에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유럽 등의 시장으로 저변을 더 넓혀 나가야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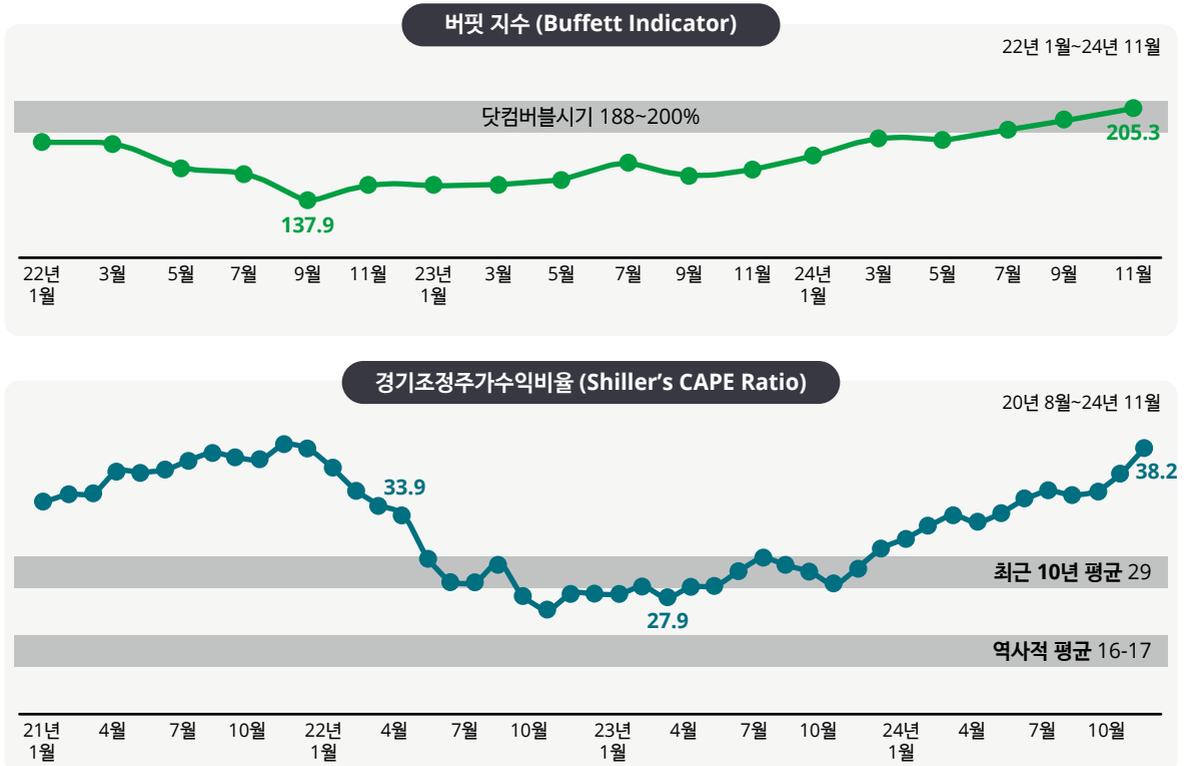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미 환율 급등과 외환시장 불안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추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의 재집권과 공화당의 '레드 스윙'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면서 주식 시장이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 금융 시장은 현재 과열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AI 관련주에 쏠려있는 자산가격 버블 붕괴가 현실화될 경우 급속한 경기 냉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시장 과열 및 리스크 요인

시장 지표로 본 미국 주식시장 과열

- ✔ 버핏 지수(Buffett Indicator): 주식시장 과열 여부를 측정하는 버핏 지표(미국 주식 시가총액/GDP)가 2024년 11월 13일 기준 205.3으로 200을 상회한다. 100보다 높을 경우 고평가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현재 수준은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 수준(188~200)의 과열 상태다.
- ✔ 경기조정 주가수익비율(Shiller's CAPE Ratio): 주식시장의 고평가 여부 확인을 위해 참조하는 CAPE(Cyclically Adjusted Price-to-Earnings ratio) 지수는 11월 13일 기준 역사적 평균 수준 16~17을 크게 상회한 38.2에 이르렀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29)을 초과하는 높은 수치로 주식시장이 과열 상태임을 시사한다.

그림 11. 시장 지표로 본 미국 주식시장 과열



출처: CurrentMarketValuation, 딜로이트인사이트

AI 기술주 과열, 블랙스완으로 작용 가능성

- ② 최근 AI 기술 기업 주가의 급등이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시스템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AI 반도체 수요 감소나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술주 전반에 걸친 자산가치 붕괴 위험이 존재한다. 과거 닷컴 버블처럼 이번 AI 버블이 급속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산가치 하락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과 금리 정책을 둘러싼 민감한 상황에서, 기술주 전반의 붕괴가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면 미국 연준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들의 정책적 대응이 실효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단기 국채 발행 규모,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단기채권 발행을 크게 확대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21년부터 미국의 단기 국채 발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도 미국은 3개월물 국채 발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재정을 운영해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과 현재의 부채 규모는 21년 28조 달러에서 24년 35조 달러까지 급격히 증가한 상태이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급증한 유동성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은 단기국채 발행이 한계에 도달하며 미국 재정 여력에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도 단기 국채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재정 확대 시 10년물과 30년물 장기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장은 장기 국채 금리가 연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유동성은 AI 및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자되며 기술 산업과 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AI 기술주에 몰려있는 자금이 블랙스완으로 작용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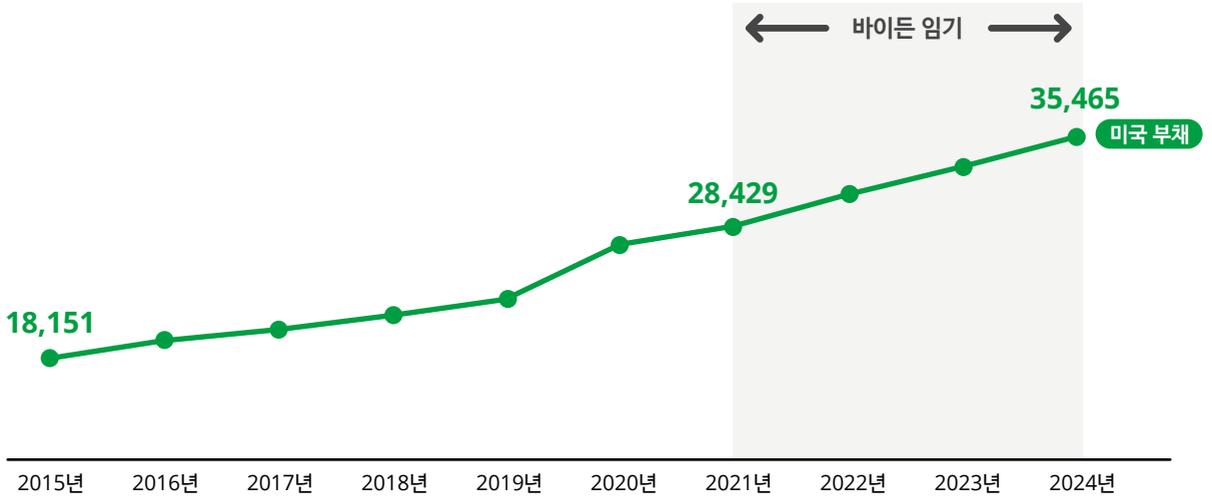
그림 12. 미국 단기채권 발행규모(US Treasury Issuance of T-bills, \$tn) (2001 ~ 2024)



출처: BofA Global research

그림 13. 바이든 정부 전후 부채규모 (2021~2024)

단위: 10억 달러



출처: Fed, 딜로이트인사이드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로 금리인하도 요원

미국은 1981년 이후 약 40여 년간 안정된 물가 수준을 유지하며, 최근 몇 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대를 경험해 왔다. 그러나 이미 미국이 막대한 채권 발행을 통해 공급한 유동성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유동성 및 재정 확대 양상이 지속될 경우 당장 2025년부터 인플레이션 시대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화폐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 경기침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수 있다. 기업들이 장기간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비해 대외 경제 환경과 금리 리스크를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미지 출처: <https://www.usatoday.com/>

주석

1. EIU, "Trump Risk Index: the global impact of a new US presidency"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2024. 11. 7
3. 한국은행,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환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2024. 08. 26
4. Bloomberg, "[Goldman says Trump's new China tariff plan would slow US growth](#)"
5. 한국개발연구원(KDI),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2024. 11. 12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4.10),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7. 한국무역협회(2024.10.06), 올해 국산차 수출물량 3분의2는 북미행...'미국 쏠림' 가속화
8.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는 외국인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법
9. 매일경제(2024.11.10), "트럼프 관세 제1타깃은 자동차 ... 美 현지생산 늘려 수출 관리를"
10. 조선비즈(2024.11.08), IRA 축소 우려... 전기차-배터리 '긴장'
11. Deloitte academy(2024.10.28), Batteries: charging the energy transition
12. IEA(2024), Global EV Outlook 2024
13. 하나증권(2024.11), 트럼프 2.0과 자동차
14. 국민일보(2024.04.16), 북미 지역에 투자 늘리는 이차전지 3사
15. 한국경제(2024.11.09), 트럼프 1기 떠올려보면...K반도체, 떨 이유 없다
16. 조선일보(2024.11.07), 러스트 벨트까지 싹쓸이한 트럼프...한국 철강 업계 "무역 장벽 높아질까" 우려
17. 산업연구원(2024.10),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18. 국가안보전략연구원(2024.02), 美 생물안전법(Biosecure Act) 발의를 통해 본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국가안보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김혜련 Senior Manager
hyerykim@deloitte.com

연구원

김선미 Senior Manager
seonmikim@deloitte.com

연구원

양원석 Senior Consultant
wonsukyang@deloitte.com

연구원

권은진 Senior Consultant
eukwan@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